
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2025. 1.



해양경찰청

순서

I 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 1

II . 2025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

III . 2025년 핵심 추진과제 5

IV 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5

I. 정부 전반기 성과 및 평가

1 주요 정책성과

- (해양안보) 전략적 경비활동으로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 및 국익 신장
 - 성어기 특별단속, 함정 증강배치, 대내외 공조 강화 등 수산자원 안보 차원의 다각적 노력으로 외국어선 조업질서* 대폭 개선
 - * 외국어선 조업질서 위반율(나포/검색) 최근 3년 평균('21~'23년) 대비 30% 감소
 - 경계미확정해역 전략경비를 통한 관할권 축적 및 GPS 교란·쓰레기 풍선 살포 등 北 안보위협에 적극적 대응으로 실제 안전사고 ZERO
 - 인공위성*, 해상용 드론, AI 등을 통한 첨단기술 기반의 해양영역 인식(MDA)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국가 해양 경비력 지속 보강
 - * '26년 관측위성을 시작으로 '32년까지 통신·수색·구조위성 발사, 위성센터 구축('23~'26년)
- (해양안전) 촘촘한 해양 종합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한 바다 조성
 - 권역별 광역VTS 구축*을 통한 해상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구조거점 파출소 확대 (26→33개소), 상황실장 직급 상향으로 즉각적 대응태세 확립
 - * 서해권 VTS('23년 9월) → 제주권 VTS('24년 9월) → 동해권 VTS('26년 예정)
 - 연안안전지킴이*, SOS 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** 등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및 「해양재난구조대법」 제정('24. 1.) 등 제도적 기반 마련
 - * 배치구역 內 연안사고 최근 3년('21~'23년) 평균 동기 대비 **34% 감소**
 - ** SOS 누르기 챌린지 134명 참여 및 어선 훈련 43,281척, 어민 교육 61,580명 실시
 - 친환경방제함(3척) 현장 배치, 맞춤형 예방활동, 민·관 협력 활성화, 배출방지조치* 등 방제 역량·인프라 강화로 피해 최소화
 - * 유류이적 등 배출방지 조치 : ('22) 156건 → ('23) 208건 → ('24) 236건

- (해양치안) 마약 범죄 등 민생 침해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력 집중
 - 해양을 통한 국제성 마약 원천 차단을 위해 인력·장비 보강 및 국내외 공조 강화를 통해 해양마약 척결 실적* 거양
 - * ㄱ 해양 마약사범 검거인원 : ('22) 265명 → ('23) 429명 → ('24) **465명**
 - ㄴ 해양 밀반입 압수량(동시투약량) : ('19) 100kg^{330만명} → ('21) 35kg^{115만명} → ('24) **612kg^{2천만명}**
 - 중대범죄수사팀 신설('24. 1.)로 해양 부패카르텔 범죄 기획수사 활성화 및 독자적 형사사법정보시스템('24. 9.) 구축으로 해양범죄 관리체계 개선
 - ※ 「해양범죄통계」 국가통계 지정('24.12.)으로 해양 치안정책 수립 기반 마련
- (국제협력) 경비·방제 등 역대 최대 적극적 해양외교를 통한 국격 제고
 -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 회의(HACGAM) 최초 개최, 베트남 공안부 퇴역함정 양여, 한-필 정상회담 등 인태전략 기반의 안보 거버넌스 강화
 - 해외 방제 첫 사례로서 필리핀 해양오염사고 지원(2. 28.), 인도네시아 해경 수색구조 교육 지원 등 해양안전 관련 교류·협력 확대

2 개선 필요사항

- Ⅰ (해양안보) 외국불법선박 대응을 위해 단속 전담함정·장비 등 보강 및 미래형 경비 체계를 갖추도록 해양경비법 개정 등 지속적 정책 추진 필요
- Ⅰ (해양안전) 전기차 화재, 신종 레저기구 사고, 친환경 新 연료에 따른 복합 해양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해양재난에 대비·대응력 강화
- Ⅰ (해양치안) 해양 마약범죄 수법 지능화와 더불어 첨단IT기술이 해양 분야에서도 도입됨에 따라 해양수사 장비·제도 측면의 고도화 필요
- Ⅰ (해양협력) 국익차원에서 해양국가와 MOU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인태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국제 안보·안전 협력을 강화
- Ⅰ (역량강화)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 요구에 따라 교육 역량 강화 필요

II. 2025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

1 추진 여건

- 미·중 패권 경쟁 가속화, 이상기후로 인한 범국가적 재난 등 뉴노멀 시대 진입에 따른 해양 안보·안전 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
 - 美 행정부 교체에 따라 중국과의 외교·경제 등 분야에서 전략적 디커플링이 예측되며, 미국 우선주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제 안보 체제는 악화될 우려
 - 다만, 중국의 해양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해운·조선 경쟁력 강화, 해양 국가와의 연합 구축 등 미국의 해양전략은 지속 강화될 전망
 - 기후 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발생 및 이상기후 리스크 가중에 따라, 재난 위기, 국민 생활 안전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의 확장
 - 에너지 시스템 전환, 탄소 중립 실현, 재난 안전관리 및 회복력 등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대두
- 인접국의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관할권 확대 등 공세적 활동 지속, 첨단 과학기술 접목에 따른 신종 해양사고 및 지능범죄 발생 우려
 - ^中 잠정조치수역에 자국 함정 상시 배치 및 어업협정선 내측까지 조사 확대, ^日 독도해역에 고속순시선 주기적 항행 등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
 - 특히, 한·일 공동개발협정(JDZ) 종료 통보 가능시점('25. 6월)에 7광구를 두고 인접국 간 이익 충돌 발생 우려
 - 생성형 인공지능(AI) 기술의 상용화 단계 진입에 따라 자율운항선박, 스마트 항만 등 해양 분야에서도 영향 확대 예상
 - 첨단기술을 활용한 복합 해양테러 위협과 新 해양산업에 대비한 맞춤형 안전 정책 수요 증가 및 대비 필요

2 추진 방향

- (해양안보) 전략적 경비활동으로 어업자원 수호 등 해양 관할권 확대
 - 단속전담함 도입, 외곽도서(백령 등) 전진기지 구축, 드론 활용 단속 전술 개발, 위성 분석 등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정 대응
 - 동·서해 경비전략구역 신설 및 대형함 확충 등 해양주권 활동 강화와 MDA 인프라 구축, 해양경비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
- (해양안전) 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관리와 협업형 해양안전문화 조성
 - 新 유형 사고 대비 테마·시기별 맞춤형 안전관리* 및 수색구조 상황 변화에 대비한 수난대비훈련 실시 등 사고 대응역량 강화
 - * 선박내 전기차 화재, 신종 레저기구 사고,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 등
 -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초등생 연안안전교육 확대 및 선박 조난상황 신속전파를 위한 SOS버튼 누르기 캠페인, 교육·훈련 지속
 - 친환경 선박 확대 등 해상화학사고 대비·대응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및 대형 화학방제함 건조 등 현장 대응 장비 확보
 - ※ 해상화학사고 대비·대응에 관한 제도 마련 및 1,500톤급 방제함('~'28년, 여수)
- (해양치안) 지능범죄에 첨단 수사기법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우선 수사 전개
 - 수중드론, 증거분석장비 등 신종장비* 도입으로 지능화되는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
 - * (신규도입) 수중드론 5대, CCTV분석장비 5대 (장비확대) 탐지장비 25대 → 30대
 - 건설비리·국고금 편취 등 해양범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고, 토착비리 척결 등 지방청 중심의 시기별·해역별 특별단속 시행

Ⅲ. 2025년 핵심 추진과제

1. 보다 전략적인 해양안보·주권 관리체계 구축

①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정 대응으로 어업안보 수호

- (입체적 대응) 위성정보를 기반으로 해역분석을 통해 함정·항공기 등 전략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국어선 선제적 대응

※ 중부권 NLL 도주선박 차단, 서해권 집단침범 대응, 제주권 海·空 합동 범장망 단속

- (부처 협력) 해수부·해군 등 유관기관 불법 외국어선 단속정보 공유 및 시기별 합동단속·순찰, 불법 어구 수거 등 협력* 강화

* **규칙 개정** 정선명령을 위한 수단(무선통신), 방법(항공기 조명탄 투하 등) 신설

② 전략적 경비활동을 통한 해양 관할권 확대

- (전략적 해상경비) 경계미확정해역에서 실효적 관할권 행사를 위해 동·서해 경비구역 신설, 대형함 확충*, 주변국 해양조사 강력 대응

* 동해 북방해역 2척('24. 10월, '25년 上), 서해 전략구역 3척('25년부터 매년 1척) 등

- (정보분석 기반 항공순찰) 기존의 정형화된 순찰패턴(협정선 등 경로 중심)에 집중 항공순찰(정보기반 전략순찰)*을 추가하여 항공 세력 운영

* 독도·이어도 및 범장망 등 불법조업 빈발 해역 중심으로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적 항공순찰

③ 안보 상황 및 해양 테러 대비 위기관리 능력 제고

- (안보위협 대비) 北 GPS 교란 도발에 eLoran 설치 등 맞춤형 대응 및 독도 등 해양영토 위협에 海·陸·空 통합 감시·대응태세* 확립

* 해경대형함(1척) 전담경비, 해경·해군항공기 주 8~9회 순찰, 경찰독도경비대·해군118전대 R/D 감시

- (대테러 역량 강화) APEC 행사 관련 드론 등 新 유형 해양테러에 대비한 전담팀 운영 및 해양 특화 전술훈련 고도화

4] **첨단감시자산 기반 미래형 해양경비체계(MDA¹⁾) 구축**

- **(광역 감시 인프라)** 관측·통신·수색구조 위성 및 위성센터 준공('26년), 해양 특화 광역 무인기 도입 연구 등 첨단 감시체계 구축

< 해양경찰청 위성사업 계획 >

관측 초소형 위성	통신·정지궤도 공공복합 통신 위성	수색구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
'26년, '28~'30년	'27년	'32년
해경, 우주청, 국방부 등	해경, 우주청, 과기부, 환경부, 국토부	해경, 우주청, 국방부, 국토부, 해수부

- **(법·기술 인프라)** MDA 구축을 위한 **법적근거*** 마련, 무선 신호 탐지 기술 및 위성 기반의 활용 기술 등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&D 지속 추진

* 기관별 분산된 해양경비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·분석하기 위해 해양경비법 개정 추진

- **(MDA 강화)** 외교부·해수부·해군 등 부처 간 공동 협의체 추진 등 MDA 거버넌스 확장을 위한 협력 강화

※ 기관별 보유 자산, MDA플랫폼 활용방안, 정보분석 및 생산정보 등 공유

5] **현장 임무 수행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·선제적 지원 강화**

- **(전력 증강)** 주변국 세력에 적극적 대응 및 견제가 가능한 성능·규모를 갖춘 함정·항공기 등 전략자산 단계별 확충으로 해양경비력 강화

※ ('24) 동해북방 3000톤 2척 ⇒ ('25~'27) 서해전력증강 3000톤 3척

- **(정비 강화)** 신설 정비창(본부), 부산정비창(소속) 兩 정비창* 체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적기 개창('25.下)을 위한 채용(106명) 및 시범운영 등 추진

* (신설본부) 서해·제주권 함정 및 대형함정 수리, (기존소속) 부산·동해권 함정 수리

- **(개인 장비)** 방검부력조끼·진압복 등 노후된 장비를 단계별 개선*하고, 국민안전 발명 대전 등 우수 제품 도입 등 현장 대응력 제고

* 개인 안전장비 7종 중 진압헬멧, 진압복(보호대 소재), 외근부력조끼 등 3종 개선 추진

1) MDA(Maritime Domain Awareness) : 위성·드론 등 첨단 감시자산을 활용해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하고, 다양한 해양정보를 융합·분석하여 위해요소를 인지·대응하는 체계

2. 현장 중심 협업형 해양안전 관리로 대응력 강화

① 위험 시기·요인을 고려한 선제적 해양안전 관리

- (시기·유형별) 봄-돌발기상·농무, 여름*-물놀이·태풍, 가을-어선집중 조업, 겨울-화재·전복 등의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
 - * 지자체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사고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지원
- (다중이용선박) 낚시객 집중 시기(5~6월, 9~11월)에 주요 항포구·조업 해역 중심 경비세력 전진배치, 안전순찰 및 안전저해행위 단속* 등 강화
 - * 음주운항, 구명조끼 미착용, 정원초과 및 해상쓰레기투기 등 중점 단속
- (연안안전지킴이 운영)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촉, 위험구역순찰, 안전시설점검 및 안전제도 등 실시
 - ※ '25. 5 ~ 10월(6개월), 연안위험구역 97개소에 194명(2인 1조) 배치 예정

② 현장 중심 상황 대응 및 구조역량·인프라 대폭 향상

- (현장 중심 상황관리) 본청 상황분석 기능 보강을 통한 상황처리 결과 공유 및 지방청 상황지휘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 상황관리 운영
 - ※ 위험지수 및 주요 사고 등 종합 분석내용으로 '상황정보리포트' 생산 및 공유
- (구조역량 강화) 선박 內 전기차 화재 등 복합상황 가정 수난대비 기본훈련, 응급환자 처치 및 해상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DMAT* 훈련
 - *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: 재난의료지원팀(전국 45개팀 운영 중)
- (수색구조 인프라 확충) 파출소·구조대 노후된 구조정 대체건조(17척) 및 첨단 수색구조장비*와 응급환자용 구급장비** 등 확충
 - * 사이드스캔소나, 수중통신기, 잠수복 등 / ** 심장충격기, 자동흡부압박기 등
- (수색구조 민간 참여) '25년 출범하는 해양재난구조대 조기안착 지원, 전문성 제고 및 교류·협력 강화로 민간해양구조세력으로서의 역할 정립
 - ※ 전우회·학회 등 다양한 해수산 단체·기관과 교류·협력 및 정부포상 등 자긍심 배양

③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제구역 확대

- (관제구역 확대) 동해·포항 광역VTS 구축, 제주 남부해역 관제구역 확대 및 새만금·기장·거제·청산도 해역에 레이더 등 관제시설 확충
※ 동해·포항 '25. 9월 구축, '26년 운영, 제주남부 ~ '25. 4월 관제구역 확대
※ 새만금·기장 ~'26년 공사 거제 ~'25 설계, '26~'27 공사 청산도 '25~'26 설계, '27~'28 공사
- (미래 VTS 기반 마련) '26~'30 중장기 선박교통관제 발전계획 수립, 디지털 해양 통신체계 개발 및 전국 VTS 통합연계망 구축 추진

④ 다각적 해양안전문화 확산 활동 전개

- (SOS 누르기 캠페인) 선박의 조난상황 신속 전파를 위한 SOS 버튼 누르기 캠페인 및 어민 등 대상 SOS 누르기 교육·훈련 등 지속
- (해양안전문화 확산) 늘봄학교와 연계, 초등생 대상 연안안전교육 확대 및 소외지역 학생과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안전문화 확산
※ 국민들과 함께하는 연안안전교실 등 안전문화 체험프로그램 확대
- (안전정보 제공) 수상·수중에서의 레저활동이 활성화·다양화됨을 고려, 유형별 사업자 및 활동자 등 대상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

⑤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·대응 역량 제고

- (제도 마련) 친환경 선박 확대, 화학물질 해상물동량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화학사고 대비·대응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* 기반 마련
* 해상화학사고 대비·대응 근거 규정 명시를 위한 부처협의, 공청회 등
- (인프라 구축) 대형화학방제함 건조(~'28년/여수), 화학보호복 등 현장대응 장비 확보 및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한 통합 방제지원시스템 구축*
* 기름·화학사고 시 확산·피해 예측 및 대응전략 수립, '25~'26년 구축(22억원)
- (환경 보전) 홍수기 재해성 해양쓰레기, 팽생이모자반·적조 등으로 인한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거·예찰지원 및 국민 참여 캠페인 전개

3. 첨단 해양치안 역량강화를 통한 수사력 확대

① 해양 법질서 확립과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한 수사력 강화

- (기획수사 강화) 해양건설비리 등 해양부패범죄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전담조직 운영*과 범죄정보수집을 활성화**하여 해양범죄를 척결

* 중요 해양경찰서 지능수사계 운영(25년),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등 확대 등

** ① 범죄정보 집중수집 기간 운영, ② 정보포상 제도 등을 통해 정보수집 활성화

- (지방청 중심 수사체계) 토착비리 척결 등 지방청 중심의 시기별·해역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시행, 단속 적시성 향상을 통한 해양 수사역량 제고

※ (기존) 본청 중심 특별단속 → (개선) 지방청 중심 특별단속(2월~)

- (해양 사이버수사)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산물, 불법 어구·장비 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* 및 해수부·온라인쇼핑협회 등과 범죄예방홍보

* (테마범죄) ①불법어구, ②수산물 불법유통, ③불법조업장비, ④유해 낚시도구 등

② 국민의 안전한 일상 보호를 위해 해양 마약범죄 강력 대응

- (단속력 강화) 해양에서 마약류 밀반입이 지능화됨에 따라 수중드론, 증거분석장비 등 신종장비를 도입하여 마약수사 단속 역량 강화 추진

※ (신규도입) 수중드론 5대, CCTV분석장비 5대 / (장비확대) 탐지장비 25대 → 30대

- (공조채널 확대) 동남아 주요 우범국과 의향서 체결 등 국제 첩보협력 네트워크 확장, 중남미 마약 단속 현지 훈련 참여 등 협력 강화

※ △ 캄보디아·필리핀·태국 등 동남아 주요 마약류 생산국과 핫라인 등 구축(6~8월)

△ 콜롬비아 해군 '오리온 캠페인' 현지 훈련 참여 정례화 등(11월)

└ M-NIC(Maritime Narcotics International Conference)

- (M-NIC 정례화) 해양 마약류 범죄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'24년에 이어 '25년 제2차 「해양 마약범죄수사 국제컨퍼런스」 개최

※ (개최시기·장소) '25. 7월, 3박4일, 인천 송도

(의 제) 진화하는 해양 마약 밀반입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

③ 해양에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으로의 발전 기반 조성

- (수사시스템 구축)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 활성화*, 통신이용자정보 사후통지시스템** 등 수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추진

* 도서지역 참고인 화상조사, 모바일을 통한 현장조사 등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

**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라 통신수사에 필요한 수사시스템 등 구축추진

- (과학수사 기반) 과학수사 공신력 제고를 위해 한국인정기구(KOLAS) 인정*, 공인 자격 취득, 최신 포렌식 장비 도입 등** 과학수사 기반 마련

* 공판에서 '공인 표준절차에 따른 과학적 증거'가 요구되어, 수사기법에 대한 인정 추진

** 사이버 다크웹·포렌식 장비 등 첨단장비 도입 및 관계기관 전문가 그룹 구성

④ 범죄 피해자 보호 등 국민 친화형 치안정책 확대

- (피해자 보호) 범죄피해자 대상 임시숙소를 지원 등 기금집행을 강화하고 전문자격을 취득한 전담경찰관을 관서별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

※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대상 외 신고자·증인 등 지원 협의

- (보상금 지급) 범인 검거 기여자 대한 보상금* 지원체계를 마련하고, 미비점이 있는 수사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형사 절차상 국민권리 보장

* (검거보상금) 법적근거 격상(훈령→법률, '24. 3.), 예산 증액('24년 5백만원 → '25년 6천만원)

⑤ 국익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국제 범죄 대응

- (국경범죄 대응) 지능화·고도화되는 국경범죄 대비·대응을 위한 전담반 운영, 법률 개정, 산업기술 유출 수사기반 구축 등 추진

※ 중부·서해·제주청 국경범죄 전담반 운영, 밀항단속법 처벌 강화(3 → 5년) 등

- (국제 협력) 밀입국자 조회 등 인터폴 시스템 활용 공조 및 국경범죄·산업기술유출 등 테마별 '국제범죄 대응 컨퍼런스' 개최로 정보협력 강화

※ 국내·외 기관 간 네트워크 확대, 中·日 등 주변국 해양치안기관 상호방문·교류 및 각국 국제범죄 사례 교환 등 국제협력 다변화

4. 민생 · 현장 · 역량 중심 조직운영 및 국제협력

① 미래인재 양성 및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정책

- (전문 특성화 교육) 해역별 치안수요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및 가상 융합기술(XR) 기반의 교육 훈련 플랫폼* 구축

* 재난안전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R&D('23~'27년, 240억) 및 첨단훈련센터('25~'27년, 57억)

- (인적 자원 관리) 함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성과자 관리, 속진형 경위 임용제 확대(5→10명), 여경 관리자 양성 등 역량 개발 중심 정책 추진

※ 저성과자 관리지침 마련, 승진 가산점 제도 정비, 여경 직위 발굴·역할 확대 등

② 국민 소통형 · 예방사고 정책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전략기획 및 행정혁신

- (전략 기획) 대·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전략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 조정 및 추진 동력 강화

※ (추진 체계) ①전략 기획 → ②정책 관리 → ③소통·협업 → ④성과 도출

- (디지털 전환^{DX}) AI·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혁신* 및 해양 재난 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·분석하는 플랫폼 개발**

* 디지털 전환 전략 연구('24년) → 세부 전략·이행 로드맵 마련 및 추진('25년)

** 해양재난분야 'AI기반 해양재난대응 기술개발(R&D)'('25~'27년, 총 98억 원)

③ 일 하는 조직문화 정착 및 법적 기반에 따른 집행력 확보

- (조직 문화) 문제 해결 중심 조직 구현을 위해 혁신역량·변화관리 확산 및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

※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, 일하는 방식 개선, 범부처 적극행정 합동회의 등 추진

- (법적 기반 강화) 해양에서 법 집행기관으로 동력 확보를 위해 임무 중심 법률 개정* 및 법률 지원 확대 등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* 개정 「해양경비법」, 「수상구조법」,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등

4 실질적 해양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양 안보 · 국민 안전 확보

- **(국제 협력 고도화)** 超 국가범죄 공조 · 다국가 합동훈련 등 도출된 의제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양자·다자 국제협력 회의 고도화 추진
※ 국제협력 자문단 구성, 중장기 해양분야 국제개발협력 방안마련, 한·미·일 합동훈련 등
- **(협력 국가 확대)** 유럽(영국 · 프랑스) 東 · 西 아프리카(나이지리아 · 케냐 등), 태도국(피지 등) 등 대륙별 주요 국가와 협력 확대로 해상 교통로 확보
※ ('25) 영국, 프랑스, 튀르키예, 말련 → ('26) 나이지리아, 케냐, 피지
- **(함정양여 체계 확립)** 퇴역 경비함정 세부 양여 절차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유지 · 보수 · 정비 연계로 경제적 효과
※ 「퇴역함정 양도 규정」 훈령 제정 및 에콰도르 국방부 3천톤급 1척 양여 등

5 현장 직원들의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사기 진작 대책 마련

- **(처우 개선)** 특수한 해양 재난사고 대응에서 발생된 PTSD(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)를 관리 · 회복을 위한 심신 치유 등 복지 인프라 확충
- **(예우 강화)** 30년 이상 장기근무 제복공무원 대상 국립묘지 안장 및 대전 현충원 內 「해양경찰 충혼탑」 건립 추진으로 자긍심 고취
※ 「국립묘지법」 개정안('25. 2. 시행) 및 ('24) 충혼탑 부지 협의 → ('25) 건립 추진

6 해양경찰 미션과 비전 중심으로 국민 맞춤형 홍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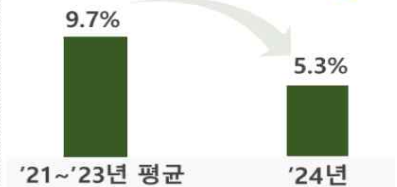
- **(정책 홍보)**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해양경찰 임무 수행과 활약을 중심으로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 송출
※ ('25) MBC every1 「히든아이」, JTBC 「바디캠(가제)」, 채널A 「강철부대 시즌4」 등
- **(협력 기반)**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래픽 라이선스 보급(소 기관) 등 홍보 역량 강화

IV. 2025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.

- ◆ 전략적 경비활동으로 국익수호와 함께 **어민들의 생업을 적극 보호**하며, 현장·협업 중심 안전관리·오염예방 정책으로 **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**

조업질서 위반율

3년 평균 대비 45% ↓



1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해양주권·안보 수호

- ▶ 꽃게 성어기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, 위성을 활용한 선제적 차단으로 조업 질서 개선 추진
- ▶ 北 GPS 교란 등 도발 대비 위기관리로 안정적 조업 지원

2 현장 중심 협업형 안전관리로 해양안전 대응력 강화

- ▶ 시기·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, 신형연안구조정 배치
- ▶ 초등생 대상 **늘봄학교**(연안안전교실), 생존수영 교육 및 해양종사자를 위한 **SOS구조버튼 누르기 캠페인** 지속

연안사고 발생현황

최근 3년 대비 8.6% ↓



마약사범 검거인원

전년 대비 8.3% ↑



3 첨단 수사기법 도입으로 민생 우선 해양수사 전개

- ▶ 수중드론 등 신종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로 지능형 해양마약범죄 원천 차단
- ▶ 토착 해양범죄 근절위한 **해역별·시기별 기획수사** 강화

4 현장 소통강화를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 추진

- ▶ 海 드림팀 등 현장 의견수렴으로 민생 애로사항 적극 해결*
* '24년 90건 발굴, 26건 개선 → '25년 95건 발굴, 34건 개선
- ▶ 지방청 중심 정보활동으로 해역별 위해요소 선제적 발굴

민생정책 개선율

개선반영/정책보고



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

전년 대비 7.4% ↓



5 해양오염 대응역량 강화로 해양환경 보전 추진

- ▶ 고위험 복합해양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**방제 인프라 구축***
* LNG방제함 현장 배치 '24년 3척 → '25년 4척
- ▶ 해양자율방제대 육성을 통한 민관 방제 거버넌스 강화